

## 새로운 성장전략기구 출범

- 일본정부가 성장전략의 사령탑으로 「미래투자회의」와 「규제개혁추진회의」를 가동
- 미래투자회의는 규제개혁을 연계시켜 산하에 「구조개혁 철저추진회의」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, 기업통치개혁, 의료·간병, 농업·관광 등 4개 분야에서 개혁논의를 심화시킬 계획임
- 새로운 기구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, 고통을 수반한 개혁에 어디까지 파고들지는 불투명하나, 저출산·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낮은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에 의한 생산성향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

- 일본정부는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에 한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늦어지고 있는 구조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임
- 아베총리는 규제개혁이 성장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, 규제개혁의 재가동을 통하여 일본경제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

### □ 성장전략의 사령탑으로 「미래투자회의」와 「규제개혁추진회의」

- 이에 일본정부는 9월 12일 성장전략의 사령탑이 될 미래투자회의와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연이어 개최
- 미래투자회의는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을 각료와 민간의원(6명)들이 검토하는 기구로서 2016년 9월 9일 신설
- 규제개혁추진회의는 2016년 7월말로 기한이 만료된 규제개혁회의의 후속조직으로서 9월 2일 일본각의에서 설치를 결정, 14명으로 구성

### □ 미래투자회의와 구조개혁의 연계

- 아베총리는 의장을 맡고 있는 미래투자회의에서 구조개혁을 종합적으로 복습하고 필요한 검토에 즉시 착수하라고 관계각료들에게 지시
- 아베 정권은 2014년 소비세 인상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하여 재정지출 등으로 대응해왔음
- 그러나 2020년경에 600조 엔으로 설정한 GDP(명목)는 2015년 시점에서 500조 엔에 불과함


- 인구감소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 중장기적인 경제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0%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
-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를 재가동시키는데 약점이 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, 미래투자회의에서는 의료·간병 분야에 대해 공적보험외 서비스와의 조합이 필요함을 명기
- 이를 통해 혼합간병 등의 확대를 기업과 개인의 수익력을 높일 방침임
- 미래투자회의의 산하에는 테마별로 「구조개혁철저추진회의」를 설치, 우선은 제 4차 산업혁명, 기업통치개혁, 의료·간병, 농업·관광 등 4개 분야에서 개혁논의를 심화시킬 계획임
-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는 농업을 당면 중요과제로 설정했음
- 전신인 규제개혁회의가 5월 답신에서 결론을 보유했던 생유의 유통개혁 등에 대하여 가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기한을 정했음
- 그러나 양 회의 모두 조직상으로는 지금까지 개혁이 생각처럼 진전되지 않았던 정부 회의의 개작에 가까울 뿐,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님

## □ 과제

- 무엇보다도 고통을 수반한 개혁에 어디까지 파고들지 불투명함
- 예를 들면 농업개혁의 경우, 생유의 유통개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. 근본적인 구조전환이 될 대규모전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겸업농가우대조치의 재검토나 기업진입을 위한 대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- 노동개혁의 장래 또한 불투명함. 해고의 금전해결 등 고용의 유동화는 일손부족에 빠진 일본경제의 생산성향상책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음
- 그러나 일본정부는 9월중에 발족할 노동방식개혁실행회의에서도 장시간노동의 시정이나 비정규사원의 대우개선 등 격차시정에 역점을 두고 있음
-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외국인수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추진되어오고 있으나 단순노동을 포함한 이민에 관한 논의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음.
- 미즈호증권 관계자는 일본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급면의 개혁뿐만 아니라 수요환기도 필요하며 나아가, 저출산·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, 외국인 수요에 의존하려면 이민 등 장기체재자의 수용에 관한 논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

- 일본정부의 회의가 난립하고 있는 점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우려요소임
  - 농업 외에 일반주택에 유로로 여행자를 묵게 하는 민박을 포함한 관광은 미래투자회의, 규제개혁추진회의 모두 다루고 있으며, 아베정권이 주도해왔던 임금인상은 미래투자회의와 노동방식개혁실행회의에서 논의함
  - 내각관방은 회의체간 연계·협력을 철저히 추진해나겠다고 하나 각각 특화분담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면, 회의체간 주도권쟁탈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병폐도 나올지 모른다는 지적임

## □ 평가

- 이번 회의에서 농업과 의료 등 소위 암반규제의 개혁에 재도전하는 외에, 인공지능(AI)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을 발판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임
- 현재 일본의 규제개혁 과제는 산적해있음. 농업에서는 낙농가가 생유판매선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없는 지정단체제도나, 전국농업협동조합(JA농업)의 개혁이 초점임
- 또 간병보험의 서비스와, 보험 외 서비스를 종합시킨 혼합간병의 탄력화도 실현되어야하고,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위한 규제·제도 개혁도 촉진되어야 하는 상황임
- 나아가 노동방식의 개혁으로서, 아베정권은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동일노동·동일임금을 중시하고 있으나,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임
  - 성장산업에 인재를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소개 등에 대한 규제개혁도 필요
- 결론적으로 저출산·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낮은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

## 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6.9.13., 2016.9.3., 2016.9.2)